

의안번호	2211382
의 퇴 인	박주민의원
회 답 일	2025.8.27.
추 계 번호	25D368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0억 8,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292억 9,800만원(연평균 58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안 제41조)	6,084	5,596	5,732	5,871	6,014	29,298	5,860

주: 본 추계 결과는 증원인원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의 수립·관리,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감독·지도,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 산업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기술 지원 등 산업 안전·노동자 보건에 관한 사무, 재환을 통한 원직 복귀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둠 —산업안전보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1조 (고용노동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직 구성·운영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청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직제를 마련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의 정원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청의 인력 조정을 다음과 같이 가정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산업안전보건청 사무를 수행 중인 인력은 본부 소속 70명, 소속기관 소속 892명으로 해당 인원이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건비 등 관련 예산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청 소관 사무 수행 인원
 - 산업안전보건청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조직(기획, 예·결산, 계약, 청사관리 등)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데 본부의 경우 최근 신설되고, 조직 규모가 유사한 재외동포청의 행정지원조직을 참고하여 50명¹⁾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1) 재외동포청 행정지원조직 현황

(단위: 명)

구 분	행정지원조직					
	청장실	차장실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계
재외동포청	3	1	6	26	14	50

자료: 재외동포청

증원되는 직원의 직급은 재외동포청 행정지원조직의 직급별 정원²⁾ 등을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배정³⁾

[표 2]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따른 직급별 증원(안)

(단위: 명)

구분	고위 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산업안전보건청	1	7	13	9	16	2	2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은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으로 구성되는데 각 청에서 근로지도,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 등 관련 사무를 수행 중이며, 각 청마다 1~2개 과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되는 경우 지방청 조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 시점에서 지방청의 규모, 관할 구역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소속 기관 행정지원조직 인력과 관련된 예산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청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입 인원과 증원인원에 대한 자산취득비와 임차료를 추계
- 공무원 보수상승률, 기관부담금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⁴⁾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2) 재외동포청 행정지원조직 직급별 정원

(단위: 명)

구분	외무직				일반직									합계
	8등급	7등급	5·6등급	3·4등급	고공단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재외동포청	2	3	5	2	1	2	—	8	7	16	2	2	50	

주: 「외무공무원 임용령」 [별표12]에 따르면, 외무직 6등급~8등급은 일반직 4급, 5등급은 일반직 5급, 4등급은 일반직 6급, 3등급은 일반직 7급에 대응됨

자료: 재외동포청

3) 외무직 8등급, 7등급은 일반직 4급으로, 외무직 5·6등급은 일반직 5급으로, 외무직 3·4등급은 일반직 6급 정원으로 적용

4)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025.7.)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인당 자산취득비	4,981천원	5,080천원	5,182천원	5,285천원	5,391천원	5,499천원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수 및 기관부담금

- (청장 및 차장)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청장(차관급)의 2025년 연봉액은 1억 4,538만원이고, 차장의 연봉액은 고용노동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고위공무원 연봉액을 준용하여 각종 수당을 합산

[표 3] 청장 및 차장 보수(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청장(차관급)	145,378	13,560	11,400	1,680	480	158,938
차장	141,884	11,160	9,000	1,680	480	153,044

주: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행정지원조직) 추계의 전제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의 보수는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 평균 연봉액을 준용하고 수당을 합산하여 1인당 보수를 산출

[표 4] 증원인력 1인당 보수(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고위공무원	138,052	9,960	7,800	1,680	480	148,012
4급	98,198	6,960	4,800	1,680	480	105,158
5급	76,062	5,160	3,000	1,680	480	81,222
6급	63,911	4,380	2,220	1,680	480	68,291
7급	46,671	4,320	2,160	1,680	480	50,991
8급	37,266	4,260	2,100	1,680	480	41,526
9급	29,098	4,260	2,100	1,680	480	33,358

주: 1.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2. 고위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3.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수 총액) 추계의 전제에 따라 청장 1명, 차장 1명 및 행정지원조직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보수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

[표 5] 보수 총액: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총액 (=직급별 1인당 보수×인원)	청장	1명	167	171	175	179	183	874
	차장	1명	160	164	168	172	176	842
	고위공무원	1명	155	159	163	167	171	814
	4급	7명	772	790	809	829	849	4,049
	5급	13명	1,107	1,134	1,161	1,189	1,217	5,808
	6급	9명	644	660	676	692	709	3,381
	7급	16명	855	876	897	919	941	4,488
	8급	2명	87	89	91	94	96	457
	9급	2명	70	72	73	75	77	367
합계			4,018	4,115	4,214	4,315	4,418	21,080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은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요율을 적용

[표 6] 기관부담금: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관부담금	528	543	560	577	595	2,8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증원인원의 보수 및 기관부담금은 2027년 45억 4,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38억 8,300만원으로 추계

[표 7] 보수 및 기관부담금: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4,018	4,115	4,214	4,315	4,418	21,080
기관부담금	528	543	560	577	595	2,803
합계	4,546	4,658	4,773	4,892	5,014	23,883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본경비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8.7%⁵⁾를 앞서 추정된 보수 총액에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산출
- 추계 결과, 기본경비는 2027년 3억 5,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8억 3,400만원으로 추계

[표 8] 기본경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경비	350	358	367	375	384	1,8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자산취득비

- 본부 기준 전입인원(70명) 및 증원인원(52명)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 1인당 508만원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활용
- 추계 결과, 자산취득비는 2027년에만 발생하며 6억 2,000만원으로 추계

[표 9] 자산취득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자산취득비	620	0	0	0	0	6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임차료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 사무공간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무공간 등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추계함
 - 전입인원과 증원인원 122명이 1인당 39m²⁶⁾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면적당 월 임차료 4,700원/m²⁷⁾과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간 임차료를 산출
 - 관리비는 임차료 대비 관리비 비율을 100%⁸⁾로 가정하여 산출

5)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 중 기본경비를 인건비로 나누어 산출

6)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의 기관유형별, 청사유형별 1인당 면적 참고

7)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의 '상권별 오피스 임대료'(2024년 4분기 기준) 대전지역 참고(세종은 조사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청 사무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는 2027년 5억 6,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억 6,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산업안전보건청 임차료 및 관리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임차료	284	290	296	302	308	1,481
관리비	284	290	296	302	308	1,481
합계	569	580	592	604	616	2,961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0억 8,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92억 9,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4,018	4,115	4,214	4,315	4,418	21,080
기관부담금	528	543	560	577	595	2,803
기본경비	350	358	367	375	384	1,834
자산취득비	620	0	0	0	0	620
임차료 등	569	580	592	604	616	2,961
합계	6,084	5,596	5,732	5,871	6,014	29,29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세종국책연구단지 2025년 임차료 대비 관리비 비율 99.5% 참고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조직 개편 사항을 타 부처 규모, 유사 사례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개정안 시행 시에는 공무원 총 정원, 부처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 규모를 결정하게 되므로, 향후 실제 증원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력 및 예산 현황(자료: 고용노동부)

□ 조직, 인력

〈본부〉

- (조직) 1본부(산업안전보건본부), 2정책관(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8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화학사고예방과), 1팀(직업건강증진팀)
- (인력) 70명(고위가 1, 고위나 2, 3·4급 1, 4급 7, 4.5급 4, 5급 25, 6급 이하 29, 시설연구관 1)

〈소속기관〉

- (조직) 광역중대재해수사과(13개), 산재예방지도과·팀(43개·2개), 건설산재지도과(13개)
- (인력) 892명(4.5급 2명, 5급 74명, 6급 342, 7급 419명, 8급 55명)
 - * (광역중대재해수사과 218명) 4.5급 2명, 5급 12명, 6급 85명, 7급 114명, 8급 1명
 - (산재예방지도과·팀 529명) 5급 49명, 6급 205명, 7급 234명, 8급 41명
 - (건설산재지도과 145명) 5급 13명, 6급 52명, 7급 71명, 8급 9명